

* 법이 개정될 경우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차등 지급되는데, 일례로 40년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경우 매월 66,000엔 전액을 지급받게 되나 기간이 짧아 질수록 금액은 줄어들게 되며 10년 동안 납부한 경우는 16,000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저연금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검토중임.

* 구체적으로 독거 생활을 하면서 연수입이 국민연금 연간 수급액보다 적은 65만 엔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1인당 16,000엔을 추가 지급하는 법률안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고령자를 가산 지급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셋째,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중립적인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2012년 3월 30일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출산휴가중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 또한 국민연금, 후생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예외없이 일원화하고, 수납한 보험료를 토대로 수급액을 계산하는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등을 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제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여 2013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함.

* 소득비례연금이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도에 가입하여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일한 보험금을 수급하는 제도를 의미

■ 넷째, 공적연금제도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취업, 의료, 학습 및 사회 참여,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¹⁹⁾

19) 内閣府, “2012年 高齢社会白書(概要版)”